2023년 국회직 9급 행정학(2023.8.26.)

• 해설 : 이승철

01 행정의 민주성에 부합하는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르면?

㉠ 의사결정의 분권화	㉡ 옴부즈만제도	㉢ 비용편익분석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해설

㉠ (○) 분권화, 권한위임은 민주성과 관련됨.
㉡ (○) 옴부즈만은 외부적 공식적 행정통제 장치로서 대외적 민주성과 관련됨.
㉢ (×)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 능률성과 관련됨.

대외적 민주성 측면(행정과정의 민주화, 행정 대 국민)	대내적 민주성 측면(행정조직 관리의 인간화)
공익과 인간의 자유·평등·존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체제를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행정체제로 나아가게 함. 민본·위민·책임(民本·爲民·責任) 행정	행정조직관리의 인간화·인격화·분권화 인간의 비합리적·감정적·사회심리적 요인 중시
• 책임행정, 행정윤리 확보, 행정의 신뢰성 • 분권화, 시민참여(정책공동체, 국민투표, 선거) • 규제개혁(경제적 규제 완화와 사회적 규제 강화) • 관민협동체제 구축(공동생산) • 행정의 투명성, 공개행정(행정PR, 정보공개, 공청회) • 대응성(반응성), 고객지향행정(TQM, 전자정부, 서비스 다양화) • 공익 추구·대변 • 정치적 중립 • 대표성(대표관료제) • 행정통제(외부통제·내부통제) • 행정구제제도(행정쟁송, 행정절차, 행정상 손해전보)	① **인간화** • Y이론적 관리 – 자아실현욕구 존중 • 민주적 리더십 • 공무원의 능력발전 : 교육훈련, 승진, 직무확충 • 공무원의 사기앙양 :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갈등의 민주적 조정(하의상달, 제안제도, 인사상담, 고충상담, 공무원단체) ② **분권화** : 행정체제의 분권화, 권한위임 ③ **참여** : 정책결정·기획과정에의 참여, MBO, OD, TQM ④ **조직** : 조직관리의 동태화(수평적·민주적 조직), 탈관료제, 비공식적 조직의 활성화, 소집단 중시 ⑤ **행태** : 공무원의 민주적 행정행태 확립, 민주적 가치관 형성

참여·분권화, 탈관료제, TQM은 대내적·대외적 민주성 모두와 관련됨.

답 ②

관련기출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0 서울9급

① 행정인의 행정윤리 확립 ② 책임행정의 확보 ③ 일반국민의 행정참여
④ 과도한 침해에 대한 제도적 구제장치 ⑤ 파레토 최적

답 ⑤

02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분석은 문제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식별함으로써 개념을 명료화한다.
② 계층분석은 가능성 있는 원인의 식별 또는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③ 유추분석은 과거 비슷하게 경험했던 문제와 비교하여 당면문제를 식별한다.
④ 가정분석은 문제와 관련된 가정들을 찾아내고, 동일한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명확한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도출한다.
⑤ 경계분석은 문제의 위치와 존재기간, 문제를 형성해 온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화하고 현재 문제와 다른 문제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의 경계를 추정한다.

해설

④ (×) 동일한 ⇨ 대립적·상충적인
• **가정분석(assumptional analysis)** : 관련집단들이 문제상황에의 합의 도출 곤란시 **문제상황 인식을 둘러싼 여러 대립적·상충적 가정을 창조적으로 종합**(가정분석은 정책과정 참여자 간 정책문제에 대한 가정(관점)이 불일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확인, 가정들의 노출, 가정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주요 가정들의 집합, 가정의 통합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충적 가정들의 통합을 도모).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분류분석	• **문제상황의 정의·분류에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기법.** •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문제상황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으로 나타내는 **귀납적(연역적x)** 추론과정.
경계분석	• **문제의 경계 설정 - 메타문제(상위문제)의 경계추정, 문제의 분석범위 설정.** • **문제의 위치, 문제 존속기간, 문제를 형성한 역사적 사건을 구체화함.** • 단계 : **포화[눈덩이]표본추출** ⇨ 문제표현의 도출 ⇨ 경계추정
계층분석	• **문제상황의 다양한 원인**을 창의적으로 찾아냄.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에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원인을 차례차례 계층적으로 확인 • **가능한 원인 ⇨ 개연적 원인 ⇨ 행동(조작)가능한 원인**으로 분류

가정분석	관련집단들이 문제상황에의 합의 도출 곤란시 **문제상황 인식을 둘러싼 여러 대립적·상충적 가정을 창조적으로 종합**. 가장 포괄적인 분석기법.
시네틱스(유추분석)(synectics)	**문제 간 유사성 조사·분석**으로 유추·비유의 창조적 활용. 과거의 유사문제 분석.
인적(개인적) 유추	분석가가 다른 정책이해관계자(정책결정자나 고객집단)처럼 **자신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 예 교통문제 분석을 위해 만원버스를 타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함께 겪어보는 것.
직접적 유추	분석가가 **둘 이상의 실제 문제 상황 사이의 유사성 탐색**. 예 약물중독 문제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전염병의 통제 경험으로부터 직접적 유추를 구성.
상징적 유추	분석가가 주어진 **문제 상황과 어떤 상징적 대용물(모형)이나 과정 사이의 유사성 발견**. 예 일정 기준에 따른 정책의 순환적 결정과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에 비교하는 것.
환상적[가상적] 유추	분석가가 **문제 상황과 어떤 상상적인 상태 사이에 유사성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탐험**. 예 국방정책분석가가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 공격에 대한 방어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핵공격 상태를 전제로 문제를 유추.
기타	복수관점분석(기술·조직·개인적 관점), 조사연구방법 활용, 논변지도분석, 브레인스토밍(자유집단토론), 델파이기법 등.

답 ④

관련기출

1.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과 설명의 연결이 바른 것은? 2014 국가9급

A.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B.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
C.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D.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 정책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으로 인과관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정책문제의 존속기간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포화표본추출(saturation sampling)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를 선정한다.
㉣ 문제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당면문제를 그 구성요소들로 분해하는 기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상적인 정책 문제를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분한다.

① A－㉠, B－㉢, C－㉡, D－㉣
② A－㉠, B－㉢, C－㉣, D－㉡
③ A－㉢, B－㉠, C－㉡, D－㉣
④ A－㉢, B－㉠, C－㉣, D－㉡

2.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 경찰간부

① 계층분석은 문제의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에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원인을 차례차례 계층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이다.
② 분류분석이란 정책문제의 존속기간에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포화표본추출기법이 사용된다.
③ 유추분석이란 유사문제에 대한 비교와 유추를 통해 특정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법이다.
④ 경계분석이란 문제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문제의 위치 에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문제의 주요국면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법이다.

답 1. ③ 2. ②

03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르면?

㉠ 복지국가
㉡ 합리적 경제인
㉢ 경제적 자유 강조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지
㉥ 최소한의 정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 ㉤ : 보수주의 정부관 / ㉠, ㉣, ㉥ : 진보주의 정부관

이념에 따른 정부관 - 보수주의 정부관과 진보주의 정부관

구분		보수주의 정부관	진보주의 정부관
이념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기독교적 보수주의, 최소한의 정부(소극국가, 야경국가)	혼합자본주의국가, 규제된 자본주의, 개혁주의, 복지국가, 사회주의, 평등주의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관(이기적 인간)**. 오류 가능성이 없는 인간.	**경제인의 인간관 부정**. 인간은 욕구, 협동, 오류가능성이 있다고 봄
시장과 정부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며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를 보임.	**효율성과 공정성(기회균등), 번영 및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지하고,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의 치유책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봄
		최소한의 정부(정부 불신 ⇨ 작은 정부) 기계적 정부관(소극적 정부관)	**적극적인 정부**(정부 개입 중시 ⇨ 큰 정부) 유기체적 정부관(적극적 정부관)
가치판단	자유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국가(정부)로부터의 자유** 강조 ⇨ 보수적 자유주의	자유를 열렬히 옹호-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국가(정부)에로의 자유 ⇨ 진보적 자유주의
	평등	**기회의 평등(기회균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 -형식적 평등(소득·부나 기타 경제적 결과의 평등은 경시)	**결과의 평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개입 허용 -실질적 평등
	정의	**교환적(평균적) 정의(거래의 공정성)**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
선호정책		**소외집단 지원 정책에 반대**(복지정책 대상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혐오) ⇨ 복지정책 축소, 성장(효과성·생산성) 중시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빈곤층, 소수민족, 여성들을 위한 기회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정책을 선호 ⇨ 복지정책, 분배(형평성) 중시
		조세 감면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경제적 규제 완화, 시장 지향 정책	**공익 목적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규제 선호**
		개량적(改良的)적 변화(점진적 변화)	**개혁적** 변화
실례		기독교 보수주의 지지 / **낙태 금지를 위한 정부 권력 사용 찬성** **공립학교 종교교육 찬성 /총기휴대 찬성**, 자주국방(매파)	기독교 보수주의 반대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 권력 사용에 반대** **공립학교 종교교육 반대 / 총기휴대 금지**, 평화군축(비둘기파)
관련 정권		우파정권과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유럽 좌파정권과 제3의 길

답 ④

관련기출

1. 진보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011 서울9급

① 소극적 자유 선호
② 공익목적의 정부 규제 강화 강조
③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④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⑤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정책 선호

2. 보수주의 국가(정부)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 2008 경남9급

①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
②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③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
④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구현

3.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2020 군무원9급

① 조세 감면 확대 ② 정부규제 강화 ③ 소득재분배 강조 ④ 소수민족 기회 확보

4.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1 경찰간부

① 진보주의 정부관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을 전제로 한다.
②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를 옹호하며,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
③ 진보주의 정부관은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④ 보수주의자의 정의는 행복의 극대화, 공동선과 시민의 미덕을 강조한다.

5. 진보주의 정부관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2005 대구7급

① 오류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
②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③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선호
④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답 1. ① 2. ④ 3. ① 4. ③ 5. ②

04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00분의 85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③ 지방공단은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④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기관장·상임이사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해설

① (○) 집권 정당의 정치이념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국영기업의 증가로 인해 공기업 증가

② (○) **공공기관의 지정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직원 정원** : **300명** 이상, ㉡ **총수입액** : **200억** 원 이상, ㉢ **자산규모** :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지정[*주1)]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정부가 자체수입 비율·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정[*주2)]		공공기관 중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정부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공공기관. 기관의 성격,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가능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①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 ②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주1) 단, 이 요건에 해당되어도 타 법률에 따른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의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주2)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 30억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③ (×)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의 유형**

운영방식	유형	설립	기관성격	관리책임
직접경영	**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도시개발 등) • 수익성에 관계없이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공급 가능	**정부조직**(구성원은 공무원). **법인격 없음**	**관리자**(공무원)
간접경영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민간 출자 불허** • 지방정부의 특정 사무 대행(**지방정부가 위탁한 것만**)	**법인**(구성원은 공무원 아님)	**이사장**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또는 민간(외국인·외국법인 포함)과 공동출자(**민간이 50% 미만 출자 가능**) • **독립사업** 경영 + 지방정부의 특정 사무 대행		**사장**

④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 제4항 · **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⑦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답 ③

05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사전달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② 조직 내 권한이 위임되는 통로로 작용하며, 행정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준거가 된다.
③ 하위 계층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조직의 통일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④ 부처할거주의가 발생하여 동일 계층의 부서 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⑤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준다.

해설

⑤ (×)조직 내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관의 지시·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체계이므로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외부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고객(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

계층제의 기능

순기능(장점)	역기능(단점)
① **공식적 의사전달 통로** – 주로 상의하달 명령의 통로	① 계층수의 증가는 **의사전달의 지연·왜곡** 가능, 하의상달 곤란
② **조직 내 갈등·대립(할거주의)의 조정** 수단(내부분쟁해결) ⇨ 상급자의 **계층제적 권위**를 통한 부하 간 갈등해결	② **조직 간 갈등 초래** – 할거주의(수직적·종적 서열주의만을 강조 ⇨ **부문간 할거주의 초래**(수평적인 협력·조정 곤란)
③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 권한 위임 및 상하 간 권한배분의 기준 및 경로** ⇨ 권한의 남용, 부당한 행사 방지·감독 ④ **책임소재의 명확화**, 신속하고 능률적 업무수행 ⑤ 지휘·감독을 통한 조직의 질서와 통일 확보 ⇨ 조직의 **통일성·안정성·일체감** 확보 ⑥ 공식적 권위의 행사수단, 내부통제수단 ⑦ 승진을 통한 사기앙양, 인간능력의 우열을 반영 ⑧ 행정목표 설정과 업무의 적정배분통로(목표의 계층성)	③ 계층제의 권위(계선)와 자율성이 강한 전문가(막료)간 갈등 우려 ④ 비민주성·비인간성 : 구성원의 인격상실 등 비민주적 관리, 참여의 제한, 상하 간 권력불균형으로 인한 근무의욕·사기저하, 지배와 통제의 비합리적 수단화(능률향상의 수단) ⑤ 최고책임자에의 의존성으로 인해 창의성 있는 업무수행 곤란 ⑥ 조직의 경직성 ⇨ 유동성·융통성 있는 인간관계 저해, **환경변화에의 신축적 대응 곤란**, 새로운 지식·기술의 신속한 도입 곤란 ⑦ **피터의 원리** : 무능력자의 승진 ⑧ 집단사고의 폐단(의견의 일치를 유도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음)

답 ⑤

관련기출

계층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20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① 계층제는 조직에서 지휘 명령 등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 한다.
② 계층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사전달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③ 하위 계층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층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④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⑤ 부처할거주의가 일어나 동일 계층의 부서 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답 ④

06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르면?

㉠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 제고	㉡ 전문성 있는 고급공무원 양성에 유리
㉢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 유지	㉣ 개방적 임용으로 공직분위기 활성화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해설

㉠ (○)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공직을 보람 있는 생애직으로 여기고 근무하도록 운영하므로 공직에 대한 충성심·자부심·일체감을 높임.

㉡ (△) 직업공무원제는 공직 선발기준으로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시하며,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경력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행정가 중심의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하다.
문제 지문에서 제시된 전문성 있는 고급공무원은 장기적인 능력발전 기회가 제공되어 전문직업관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옳은 내용이다.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그 동안의 기출문제 지문은 아래와 같이 출제되었음을 확인 바람.

행정을 **전문직업분야로 확립.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를 추구. 전문직업의식 강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확보
폐쇄형 임용으로 인해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 충원 곤란. 전문행정가(전문가적 행정인) 양성 곤란. 행정의 전문성(specialism) 약화**

㉢ (○)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므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안정성·일관성·계속성을 확보한다.

㉣ (×) 신분보장, 폐쇄형 임용을 특징으로 하므로 공직사회의 침체나 보수성, 관료의 특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장점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안정성·계속성·독립성 확보** ② **행정의 중립성·독립성·공익성** :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정당정치의 폐단을 방지 ③ **내각책임제의 성공요건** :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공백상태를 방지,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 유지 가능 ④ 신분보장과 승진기회 부여를 통한 **사기앙양**과 경력중심의 승진제도 운영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⑤ **전문직업의식 강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확보** ⑥ 공직에서의 이직률 저하, **공직에 대한 충성심 제고** ⑦ 공무원은 정부에서만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육성되므로, **정부와 공무원 간 온정적·의존적 관계**가 강화됨.
단점	① **관료침체와 민주통제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한 공무원집단의 특권집단화, 관료주의화와 민주통제 곤란과 책임성 약화 ②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 무사안일주의, 공직사회의 침체, 보수성, 현상유지성향, 개혁·변동에 대한 저항 ③ **행정의 전문성 저해, 전문행정가 양성 곤란** : 폐쇄형 임용으로 인해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 충원 곤란, 계급제라는 공직분류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 곤란(직업공무원 신규채용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지만 임용 후 승진임용은 폐쇄형에 의하므로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곤란). ※ 직업공무원제는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를 추구하지만, 전문행정주의(specialism)를 저해. ④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저해** : 학력·연령의 엄격한 제한으로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을 제약하여 민주주의 평등원칙에 위배 ⑤ **직업전환 곤란** : 정부의 공직에서만 필요한 직업인으로 굳어짐 ⑥ **승진지망의 과열** : 승진지망의 과열현상과 승진적체의 문제 야기

답 ③

관련기출

1.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 국가7급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② 엽관주의 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와 실적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9급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형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3.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행정사

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다.
③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직 분위기의 침체가 우려된다.
④ 일반행정가 보다는 전문행정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⑤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과 관료의 병리현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4.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1 경찰승진

① 직위분류제에 입각한 공직분류 구조가 필수적이다.
② 폐쇄형 임용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③ 전문가적 행정인 양성에 유리하다.
④ 완전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5.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사회복지9급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성공적으로 확립되려면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행정의 계속성·안정성·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6. 공무원채용제도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7급

①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②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영국의 공무원체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적제의 영향을 받았다.
③ 엽관제는 대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주었다.
④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⑤ 실적제는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을 충족시킨다.

7.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09 국회9급

①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②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당 및 정치지도자의 지도력·통솔력을 강화한다.
③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분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④ 공무원집단의 폐쇄성과 관료주의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인한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다.

답 1. ④ 2. ② 3. ④ 4. ② 5. ④ 6. ① 7. ②

07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는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규제 법령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②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위험수준은 증가한다.
③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이다.
④ 규제 일몰제(Sunset law)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는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설

① (×) **규제의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 : 규제가 규제를 낳아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

② (○)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 규제가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달리 반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현상

①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된다. 예 오염 없는 세상을 위한 고도의 규제 ⇨ 한정된 집행자원으로 규제 불가
②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한다.** 예 새 차에 대한 환경규제·안전규제 강화 ⇨ 새 차 가격 상승 ⇨ 헌 차 이용 ⇨ 환경오염 증가
③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예 현 시점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기업의 시장 독점 초래 ⇨ 경쟁기업 소멸 ⇨ 신기술 개발 저해
④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예 최저임금제 도입 ⇨ 무능한 사람들, 즉 최저임금제로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의 해고
⑤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든다. 예 제품정보 공개 의무화 ⇨ 기업의 광고 인센티브 감소(공개해야 하는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 시장에서 제품 정보 감소로 소비자의 판단 근거 축소.

③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의의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
내용	① **실증특례** : 일정 조건하에 시장에서의 실증 테스트 허용 ② **임시허가** : 우선 시장에 출시하도록 임시로 허가 후 ③ **신속확인** : 규제 유무 불분명시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유무 확인

④ (○) **규제일몰제(규제존속기한·재검토기한 명시)** :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의 신설·강화시** 계속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 등에 규정해야 하며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 네거티브 규제는 무역규제 분양에서 통용되어 온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의 구분에서 유래함(포지티브 리스트는 수출입 허용 품목만을 명시하고, 그밖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리스트는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목만 명시하고, 명시된 품목이외에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허용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또는 '사전 허용-사후 규제'방식의 의미로 사용.

규제의 개입 범위 :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 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 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답 ①

관련기출

1. 정부규제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2022 소방간부

㉠ 관리규제란 정부가 피규제자가 만든 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대표적 예이다.
㉡ 포지티브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 포획이론은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사익을 옹호한다고 말한다.
㉣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와 소수의 비용 부담자가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규제피라미드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3 경찰승진

① 규제피라미드는 피규제자의 규제 불응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②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피규제자에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③ 사회적 규제는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로서, 사회적 규제의 역사는 경제적 규제의 역사보다 짧다.
④ 규제의 역설이란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규제가 가진 본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회8급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답 1. ② 2. ② 3. ②

08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옳은 것은?

>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 ○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
> ○ 상위정책결정(메타정책결정)을 중시

① 최적모형(Optimal model)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③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④ 사이버네틱스모형(Cybernetics model)　⑤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해설

최적모형은 기존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책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초정책결정), 합리모형에 대해서도 정형적인 결정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례가 없는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초합리적 아이디어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초합리성)하는 결정모형이다.

경제적 합리성 (양적 모형)	합리적 결정의 효과가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합리모형을 적용하며, 정책결정에 투입될 자원·시간·노력 등을 정책결정의 각 단계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함.
초합리성 (질적 모형)	자원·시간·노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특히 선례가 없거나 매우 중요한 비정형적 결정에는 직관·창의·판단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가 필요.(합리적 요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

답 ①

관련기출

1.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2013 지방9급
① 최적모형　② 점증주의　③ 혼합탐사모형　④ 만족모형

2. 정책결정 모형인 최적모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4 경찰간부
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절충할 수 있는 모형이다.
② 합리적 종합적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순수한 합리성에 대한 현실적인 차선책(second bests)을 제시한다.
③ 점증주의적 정책의 개선으로 합리적·종합적 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이 아니라 규범적 최적모형(normative optimum model)을 제시한다.
④ 직관, 판단, 창의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extrarational factors)를 강조하지 않는다.

3. 드로(Y. 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5 국회8급
①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이론이 과도하게 계량적 분석에 의존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②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④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결정을 다룬다.
⑤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결과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

답 1. ① 2. ④ 3. ④

09 로위(T. Lowi)의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르면?

> ㉠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박물관 건립, 교육서비스 제공
> ㉡ 재분배정책 – 직업훈련사업, 대학입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방송국 설립 허가
> ㉢ 규제정책 – 상품의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 공해배출부과금제도
> ㉣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정부기구 통합, 공무원 보수 조정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해설

㉠, ㉢, ㉣은 옳음
㉡ (×)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은 재분배정책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분배정책,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혜택을 주는 대학입학의 농어촌 특별전형은 재분배정책, 방송국 설립 허가는 경쟁적 규제정책.

답 ③

관련기출

1.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3 지방9급
① 분배정책－사회간접자본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② 경쟁적 규제정책－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③ 보호적 규제정책－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④ 재분배정책－누진세, 사회보장 지출, 항공노선 취항권 부여

2. 정책유형과 사례 간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3 군무원9급(수정)

① 규제정책 - 환경규제, 금연정책, 마약단속
② 분배정책 - 종합소득세, 임대주택, 노령연금
③ 상징정책 - 국경일, 한일월드컵, 국군의 날
④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선거구 조정, 행정구역 통합

3. 로위(T. Lowi)의 정책 유형별 사례로 틀린 것은? '2022 경찰간부

① 분배정책 : 고속도로 건설
② 재분배정책 : 저소득층의 소득안정 정책
③ 규제정책 : 식품위생에 관한 정책
④ 구성정책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

4. 정책의 유형과 실제 정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2005 국회8급

① 상징정책 : 국경일, 애국지사 동상 건립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저소득층 조세감면
③ 규제정책 :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④ 추출정책 : 토지수용, 준조세 갹출
⑤ 분배정책 : 선거구 조정, 공무원연금 정책

답 1. ③ 2. ② 3. ④ 4. ⑤

10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② 2019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④ 국가경찰사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이 있다.
⑤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이 있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③ (○)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한다(x)
☑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x) -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음.

②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 시행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국에 자치경찰제 시행(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영)

④⑤ (○)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일정 사무임. 정보·보안·외사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임. 치안·방범·교통·경비·수사는 양쪽에 분할 수행됨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단,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수사사무 일부(지역밀착형 수사업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답 ②

11 우리나라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는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② 「국회인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선임하는 국회 소속 공직자가 포함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혹은 단체 간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해설

① (○) **행정위원회**

㉠ **개념** :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로 부와 국을 가지고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 권한 행사를 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 의사결정권(의결권)과 집행권을 지님.
㉡ **특징** :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가지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예** : 소청심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② (×)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음.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기능을 담당.
• **국회인사규칙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

③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
2. 국회의장이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9명

④ (○) **헌법 제114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 **조정위원회**

㉠ **개념** : 조직 간이나 개인 간 상이한 여러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 **특징** : 위원회의 결정은 건의의 성질만 가진 경우도 있고, 법적 구속력(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예** : 경제장관회의, 노동위원회(노동쟁의 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답 ②

12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중 정책결정자들은 추상적인 수준의 정책 방향만을 제시하는 반면, 정책집행자들이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유형은?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관료제적 기업가형
④ 재량적 실험형 ⑤ 고전적 기술자형

해설

• **재량적 실험형**
– 결정자 : 추상적 목표만 설정
– 집행자 : 구체적 목표 및 수단을 정할 재량권을 부여 받음(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나까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고전적 기술 관료형 (classical technocrats)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지. • 결정자는 계층제적(위계적) 명령구조를 형성하고, 특정 집행자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만 위임**. • 집행자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집행자가 충실히 집행. 결정자가 정책집행자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함. • 집행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님.
지시적 위임자형 (instructed delegates)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됨. •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는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함. •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집행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고, 다만 **수단의 선택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지니게 됨. • 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관리적]·협상적[교섭적] 능력**을 소유.

협상자형 (bargainers)	•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 반드시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지만. 집행자와 목표의 소망성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결정자와 집행자 간, 집행자 상호 간 **목표와 수단에 관해 협상**하며, 힘과 협상력이 우월한 집단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됨.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의 권위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을 때 나타남.
재량적 실험가형 (discretionary experimenters)	•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립 능력이 없고, **집행자에게 광범한 재량을 위임**하려는 유형. • 정책결정자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정보·기술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그침(**결정자는 추상적인 일반 목표는 지지하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음**). • **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집행수단을 개발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 • 집행자는 과업의 수행의사와 수행능력이 있음.
관료적 기업가형 (bureaucratic entrepreneur)	• **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완전히 통제** • 집행자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이나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집행자는 그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며 달성할 능력도 보유. •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흥정하여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얻어낼 수 있음.

구 분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자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목표	추상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협상 결과에 따라 역할 분담	결정자	집행자
	구체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수단	행정적 수단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기술적 수단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집행자의 재량		재량권 적음 ←				→ 재량권 많음
정책평가기준		효과성	효과성, 능률성	지지자의 만족도	수혜자에 대한 대응성	체제유지도

답 ④

관련기출

1. 정책결정자들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정책방향 제시에 머문 채 정책의 대부분을 정책집행자들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은? 2016 소방간부

① 지시적 위임형 ② 재량적 실험가형 ③ 협상형 ④ 고전적 기술자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2. 다음은 나까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집행 유형 중 어느 유형인가? 2013 경찰승진/ 2005 국가9급

> ㉠ 일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이다.
> ㉡ 대립·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구체적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협상자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3. R. Nakamura와 F. 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 5가지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011 국회9급

>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결정자들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들에게 위임한다. 집행자들은 정책 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하에 관장한다.

① 지시적 위임가형 ② 고전적 기술자형 ③ 협상가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답 1. ② 2. ④ 3. ④

13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부처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종합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국가재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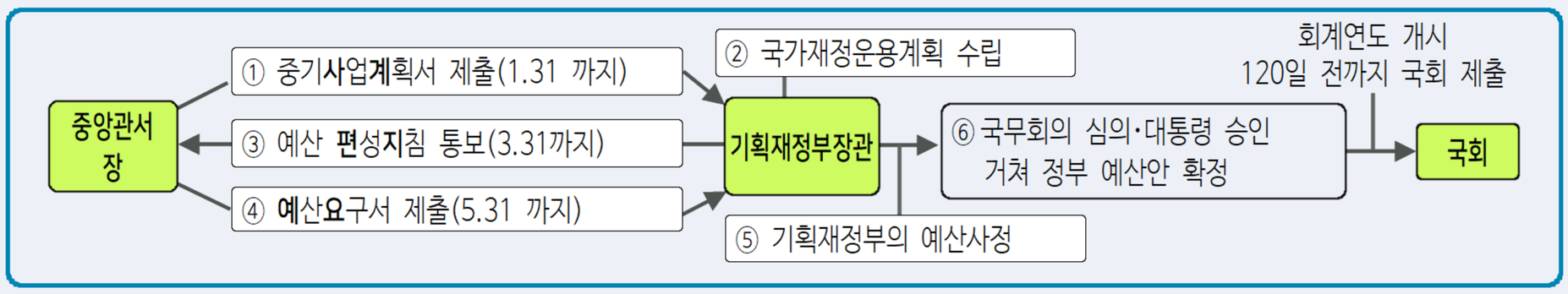
①②③④ (○)

-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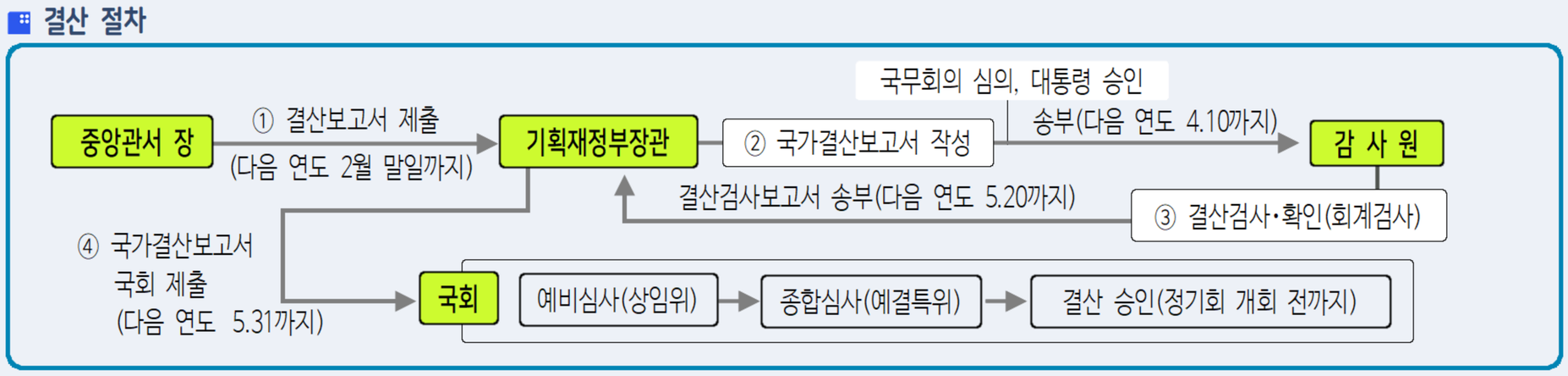
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절차



결산 절차



답 ⑤

관련기출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간부

① 정부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②

14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定員)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교원(敎員)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專任者)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가입 가능	①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 ·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단, 교원 제외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③ **별정직 공무원** ④ 위 ①부터 ③까지 해당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가입 불가능	위 가입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음 공무원은 가입 불가. ①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령 ·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나.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 · 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의 임용·복무·징계·소청심사·보수·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운전 업무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4.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나.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② (○) **단체교섭·협약 사항**

단체교섭·협약 가능 사항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단체교섭·협약 불가 사항	법령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	
	㉠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③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④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5. 별정직공무원

구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	① **일반직·별정직**	① **일반직·별정직**
	② 특정직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단, 교원 제외 – 교원은 교원노조법 상 교원노조 가입)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③ **위 해당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답 ⑤

15 윌슨(W. Wils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무원이 교체되는 엽관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② 행정학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무엇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③ 정부의 일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영역에 정당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였다.
④ 19세기 말에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를 발표하여 행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⑤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 그리고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했다.

해설

③ (×) 19C 중엽 엽관제의 비효율과 낭비 및 부패의 만연에 따라 이를 혁신하려는 진보주의 개혁운동(progressive movement)이 일어나면서 실적주의를 확립시킨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고 정치적 중립이 천명되었다. 진보주의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W. Wilson은 1887년 발표한 「행정의 연구」를 통해 정책집행 업무를 맡는 행정에 대한 체계적·적극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 확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창**했다. W. Wilson은 행정학을 정치학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자 절대군주제하에서 발전한 유럽 행정의 선진적인 면(예 1901년 베버의 저술 '관료제이론')을 받아들여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제와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제와 유럽의 비민주적 행정체제(관료제)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있고, 또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윌슨은 행정은 사무(Business)의 분야이고 정치의 영역 밖에 존재하며 이미 수립된 법률·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관리·사무·기술체계라고 보았다.

답 ③

관련기출

1. 윌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7급(1)

①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② 19세기 말엽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스 중심의 타락한 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을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④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윌슨(W. Wilson)이 쓴 1887년 논문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의 내용과 영향으로 옳은 것은? 2015 경찰간부

① 그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학을 경영학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②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을 중심 기능으로 하므로 행정가는 대표성보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③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정연구 논문의 주장과 일치한다.
④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답 1. ④ 2. ③

16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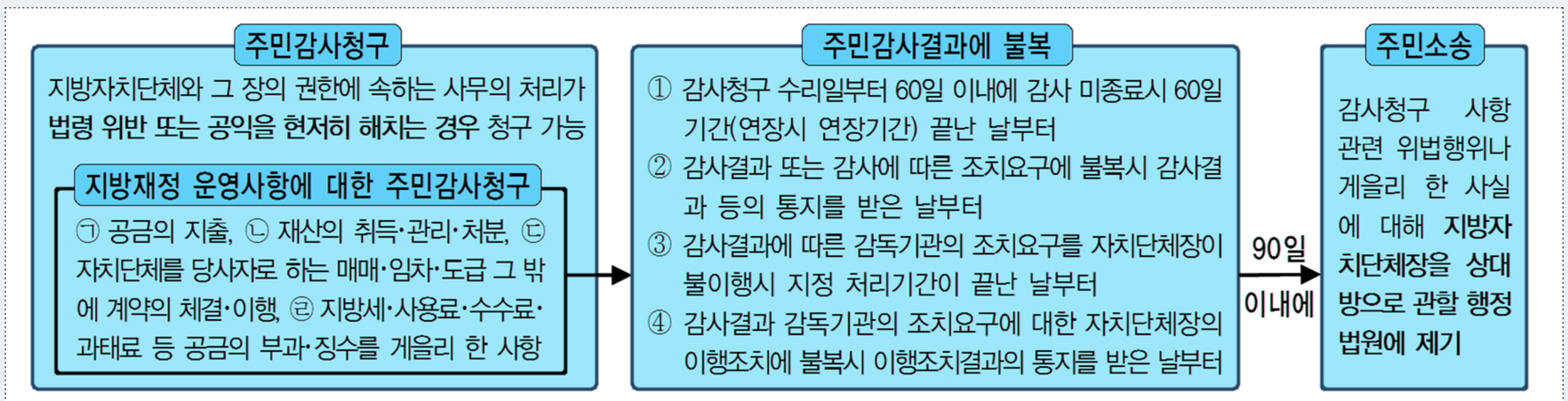
① 단체위임사무의 예로서 시·군의 재해구호, 도의 국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②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한다.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주민소환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지역소방, 상하수도, 오물처리 및 청소, 시장·병원·공원·도서관·운동장 설치, 초등학교교육, 학교급식, 도시계획, 도서관, 지방세 부과·징수 등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 징수, 시·도의 국세징수, 도의 국도 유지·수선, 광역자치단체의 하천 보수·유지, 국유하천 점유료 및 사용료 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사무, 전염병예방접종, 재해구호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징병·병역자원관리,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경제통계, 농업개발, 상공업 및 수산업 진흥업무, 공유수면매립면허, 지적, 국세조사

② (○)



③ (×) • **지방자치법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cf) • **지방재정법 제61조** :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④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10조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자 중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짐(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은 18세 이상)

⑤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③

관련기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3 지방9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③

1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시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만을 강조한다.
② 장기간에 걸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및 사회구조 등으로 구성된다.
④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본이다.
⑤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 분열과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다.

해설

① (×)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간 자발적·수평적·협력적 네트워크로서 정부 주도하의 국민운동에 의해 사회자본이 형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의 독립적인 집단과 상징적인 관계에 있고,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 깊은 공적·사적 상호관계는 정부가 사회 행동가들에게 그들 상호간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집단 이해 형성 과정을 증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지원,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도 요구되기도 한다.

답 ①

18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보통교부세 ② 특별교부세 ③ 부동산교부세 ④ 소방안전교부세 ⑤ 분권교부세

해설

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던 자금으로 2015년 1월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
•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답 ⑤

19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移用)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산의 전용(轉用)은 확정된 예산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있다.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그리고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예산총계주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해설

㉠ (○)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 **국가재정법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이체(移替)에 대한 내용임.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상호융통.

•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 · 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 · 관 · 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 · 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
-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②

20 정부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야경국가인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국민생활 부문에서는 최대한으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③ 1979년에 취임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 공공주택 민간 매각 등 정부의 기능 축소를 지향하였다.
④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냉전시대를 맞아 정부 기능 확대를 통한 크고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였다.
⑤ 21세기에는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성, 형평성, 공공가치 등을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후기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다.

해설

①② (○)

18C 근세국가	19C 근대 입법국가	20C 현대 행정국가
절대군주국가 절대국가 관헌국가 경찰국가 군주 = 국가 군주(국가)의 절대권력 행사 정치와 행정의 미분화, 중앙집권	→ ⇧ **시민혁명** ↓ 권력분립 대의제도 (의회제도)	**작은 정부(Cheap Government)** 입법권 > 행정·사법권 소극국가(자유·입헌·보안·질서·야경국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국가는 필요악) 소극적 기능(치안·외교·질서·국방·조세) 사회안정화 기능, 정책집행기능 국가와 사회의 2원성 자본주의 A. Smith – 자유방임주의, 예정조화관 보이지 않는 손(가격기구,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 대의제도의 발달, 입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
	→ ⇧ **시장실패** 1930년대 세계대공황 (대량실업) ↓ 정부규제 정부개입 필요	**20C초 큰 정부(Big Government)** 행정권 > 입법·사법권 적극국가(직능·복지·조정·경제·급부·봉사·문화국가)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행정 적극적 기능(복지·급부·조정) 사회안정화 + 사회변동 기능, 정책집행 + 정책결정기능 국가와 사회의 동일성·1원성 수정자본주의 Keynes – 개입주의, 유효수요이론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시장실패 치유 대의제 쇠퇴, 대중민주주의의 등장, 시민사회 약화 자유권 제한과 실질적 평등의 보장

③ (○), ④ (×)

- **신보수주의** :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정부가 실시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개혁정책(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1970년대 경험한 만성적인 stagflation과 과다한 복지지출로 정부재정이 압박을 받자 작은 정부론(감세와 정부지출 축소),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정책의 축소를 주장. 유럽우파정권(신우익)이 추진한 통치철학으로,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됨.
- 레이건 대통령은 신냉전시대를 맞아 군비강화정책을 취했지만 '작은 정부'와 '시장중심적 경제정책'을 추구했다. 레이건은 1981년 2월 18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네 가지 경제개혁을 발표했다. 첫째, 1982년에 연방정부 지출 414억 달러 삭감을 요구했다. 둘째, 소득세를 3년 동안 해마다 10%씩 삭감하여 총 30% 삭감을 요구했다. 셋째, 효과가 없고 부담스러운 정부규제를 철폐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통화정책 실시를 요구했다. 레이건은 자신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미국을 위한 새로운 시작 : 경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곧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레이거노믹스란 경제정책에 반영된 레이건의 철학을 뜻한다. 이는 곧 '정부지출 삭감, 감세, 규제 완화 및 철폐, 통화 긴축'을 통한 경제개혁을 뜻한다.

⑤ (○) 신공공관리론은 능률성, 경제적 가치를 중시, 후기신공공관리론(탈신공공관리론)은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도 동시에 고려.

답 ④

관련기출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9급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②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답 ④